

전환기의 석유정책과 석유산업의 과제

金 乾 洽
(本誌 편집인)

새해는 항상 우리에게 未知의 章으로 열린다. 88년이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기대와 함께 넘어야 할 숱한 난관, 치러야 할 거창한 과업들과 함께 열렸다. 40년만에 처음으로 갖게 되는 평화적 정부이양이라는 前人未踏의 세계, 은인류평화의 祭典인 서울올림픽의 주최등 설렘과 기대의 새해이기도 하다.

특히 새정부는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와 혁신을 예상케 하고 있다. 盧泰愚대통령당선자는 지난해 12월의 대통령선거에서 경제부문에서 많은 선거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자유기업주의를 수호하고, 경제의 민주화를 추진하여 각종 정부규제를 축소하며, 정책결정에 있어서 민간참여의 폭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기업의 자율성제고를 통해 시장경쟁원리를 과감히 도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행정력에 의한 경제질서는 앞으로 자율에 의한 질서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자율화는 새해에 이룩해야 할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기업은 하나님의 은총의 사회적 示顯이라고까지 일컬어지고 있다. 인간의 창조성, 자유, 협동, 통찰력이 개발되는 도구이며, 이로써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기업은 國富를 늘리고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룩한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성을 제공해 준 원천이기도 하다.

새 시대의 경제가 민간주도로 영위되어야 함은 「민중화」로 가는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정치민주화는 필연적으로 경제민주화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통제없는 기업의 자주적 창위가 만개해야 성숙된 경제로의 이행이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경제개발은 정부주도의 先唱과 기업의 後唱으로 빈약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정된 부문에 투입할 수 있었다. 그것은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국제수지흑자와 GNP 1천억달러를 넘는 시점에서는 그것이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민간주도경제로 대체되어야만 최대의 효율로써 선진경제를 이룩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경제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라 석유정책 역시 제도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가 국내油價의 환율연동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바로 「자율화」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석유정책의 기조는 개발년대 초기인 70년대에 형성된 것으로 그동안 국내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이에 따라 석유산업도 크게 성장하였다. 석유사업법 제정 당시 영세하였던 국내석유산업은 그동안 국내경제의 성장발전에 따라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총매출액이 6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또 수요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시설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품 판매중 국제시장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상승하여

새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방향

구 분	정 책 방 향
1. 經濟政策基調	• 안정성장·공정분배
2. 경제정책원칙	• 自由企業主義수호·反불로소득·反인플레이 • 反특혜와 규제배제·조세부담 형평실현
3. 經濟民主化	• 공정경쟁보장·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4. 복 지	• 정부규제축소·정책결정에 민간참여 확대 • 전국민의료보험제 실시·국민연금제 실시 • 최저임금제 적용 확대·공공임대주택건설(50만호) • 저소득층 국민주 매입지원·근로소득공제한도·공제율 인상 • 농민연금제 조기정착·농어촌 종합대책 마련
5. 대외경제정책	• 通商壓력에의 신속적 대응·外換去來 자유화 및 원화의 국제화 추진·輸入 자유화 추진·資本市場 점진적 개방·외국인투자 세제 혜택 축소·지역별 무역수지 적정관리·對 共產圈 交易 확대
6. 산업정책	• 衡平性 제고
(1) 大企業	• 특혜지원배제·정책금융 축소
(2) 중소기업	• 기업집단내 상호출자 금지·出資總額제한·不公正去來규제 강화
7. 금융정책	• 租稅·금융지원 강화·지방 중소기업 강화 • 금융자유화 추진(금리자유화, 한은독립성 보장, 금융기관 실질적 민영화)·금융산업간 업무영역 조정
8. 자본시장육성	• 기업공개·유상증자 적극 유도·국민주 분배(7개 주요 公企業 정부보유주식 매각)·자본자유화 추진

트레이딩기능이 확대되어 석유산업의 구조도 점차 국제화되고 있다. 또 석유개발등 상류부문에의 진출도 활기를 띠고 있으며, 석유화학, 유탄유등 관련사업에의 참여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개발년대의 초기에는 소요량확보가 최우선과제였으나, 이제는 품질의 고급화, 서비스의 개선 및 가격할인등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의 공급을 요청하는 소비자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같은 소비자욕구의 다원화 및 고급화 앞에 석유에 관한 한 전지전능한 권한을 보유했던 정부는 점차 능력의 한계를 노출할 수 밖에 없으며, 석유산업 역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기업의 사회성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석유산업의 자율화의 可視的인 결과는 油價제도의 자율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은 시장기능에 의하여 형성, 변동되는 것이 자유경제제도의 대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까지 엄격하게 석유제품가격결정에 개입해 오고 있는 것은 국내외의 석유시장이 원만한 시장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시장의 왜곡현상은 예전에 비해 크게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확대된 민간경제규모나, 또 원하던 원치 않든 불가피하게 진전되고 있는 경제의 대외개방화와 국제석유시장의 수급이 완화되는 가운데 석유류가격에 대한 정부규제의 완화, 더 나아가 油價자유화로의 제도전환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시장가격하의 경쟁만이 기업에 생명력과 활력을 주며, 소비자나 국가에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기본원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日本の 경우, 지난 82년부터 油價통제를 자율화한 이래 최근에는 인허가등 그동안 정부가 통제해 오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 1단계(1987)=석유정제설비 허가제의 탄력적 적용.
- 2단계(1988)=휘발유생산쿼터제도 폐지.
- 3단계(1989)=주유소 신설에 대한 행정지도제도 폐지
- 4단계(1991)=원유처리 및 생산계획지도제도 폐지

이제 우리도 그동안 정부가 전면 통제해 오던 석유정책의 공과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창의적 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게하고, 에너지자원이 시장기능에 의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정책전환을

검토해야 할 때이다.

이와 함께 석유산업도 과거의 관주도하의 타성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자율화」의 흐름을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후자시대에 걸맞는 기업의 자율성 제고는 새해에 정부와 업계가 이룩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기업의 자율화는 기업의 책임이 요구되며, 또한 기업의 국민에 대한 도덕성이 확인된다.

99년은 경제민주화의 기초위에서 경제의 기본질서가 재편되는 한해가 될 것이다. 석유산업은 전환기를 맞아 슬기로운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

